

인구감소시대의 지방소멸위기,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?

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지역재생이란?

- 지역재생이란 지역을 재활성화시킨다는 의미이며, 다시 소생시킨다는 의미에서 전제되어 있듯이 한 때 번성했던 지역이 쇠퇴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재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 정책적 목표임
- 지역재생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엔 지역 내 고용창출과 같은 경제적 시책, 지역 공동체 회복과 같은 사회 프로그램, 도심재개발과 같은 물리적 프로젝트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
- 단, 쇠퇴지역의 특성상, 사회적 배제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의 합리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적 방식이 독려될 수밖에 없다는 공감대는 형성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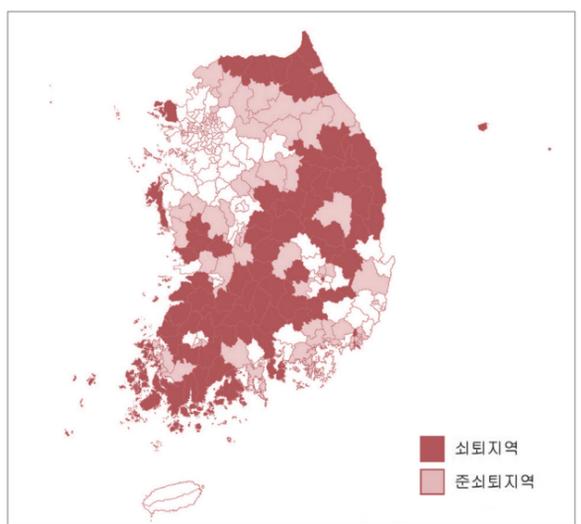
우리나라 쇠퇴지역의 특성

- 복합쇠퇴지수 산출을 통해 한국의 쇠퇴지역을 판별하고 분석

※ 복합쇠퇴지수 지표

- 인구사회영역 : 연평균인구증감률, 순이동률, 노령화지수, 평균교육연수, 독거노인가구비율, 천 명당 기초생활수급자수
- 산업경제영역 : 재정자립도, 1인당 지방세부담액, 천 명당 종사자수, 사업체당 종사자수, 제조업종사자비율, 고차 서비스업 종사자비율, 천 명당 도소매업 종사자수
- 물리환경영역 : 신규주택비율, 공가율, 노후주택비율

- 지역쇠퇴를 야기하는 영역은 인구증감률, 노령화 지수 등 인구사회영역과 밀접한 상관성을 나타냄
- 인구감소 및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는 강원, 경북, 전북, 전남 일대의 지역이 가장 크게 쇠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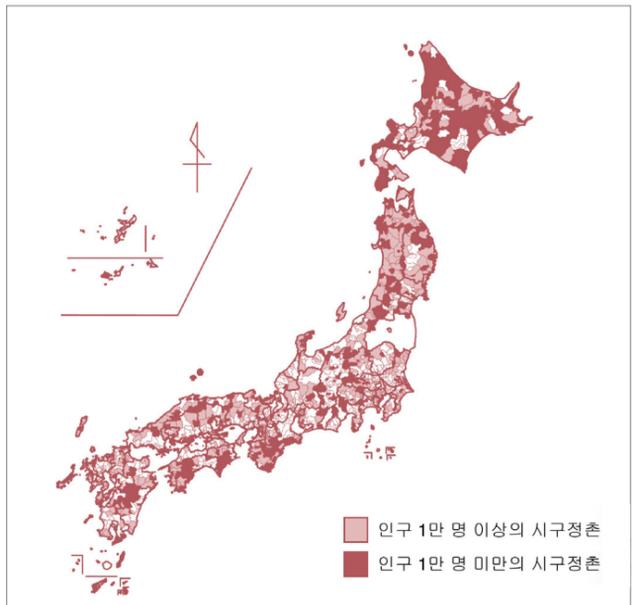


〈한국의 쇠퇴지역〉 한국지방행정연구원, 2012

해외사례 : 일본의 지방창생전략

- 2014 일본창생회의에서 지방소멸 도시 발표
 - 젊은 여성인구(20~39세)가 50% 이상 감소할 경우 소멸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분석
 - 1,727개 시구정촌 가운데 896개가 소멸하고 이 중 523개는 인구 1만 명 이하 지역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

-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책 마련
 -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‘마을·사람·일 창생법(2014)’ 제정
 - 2060년 1억 명 인구 확보를 위한 ‘국가장기비전 및 국가 종합전략(2015~2019)’ 마련
 - 국가비전과 전략에 대응하여 지방도 지방인구비전 및 지방관 종합전략 수립
 - 우수 지방시책에 대해서는 교부금 지원(100% 보조율)



〈소멸가능성 도시〉 일본 국립사회보장/인구문제연구소, 2014

○ 일본의 마을·사람·일 창생 종합전략

기본목표	주요 추진시책
1. 지방의 안정된 고용 창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• 지방인재환원, 지방인재육성 및 고용대책 • ICT 활용으로 지역 활성화
2. 지방으로 새로운 사람 유입 촉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방이주 촉진 • 은퇴자 커뮤니티 지원 추진 • 기업의 지방거점 강화, 지방채용·취업 확대 • 지방대학 등 활성화
3. 젊은 세대의 결혼·출산·육아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젊은 층 고용대책 추진 • 임신, 출산, 자녀교육 지원 • 일과 생활의 조화 실현(일하는 방식의 변화)
4. 시대에 맞는 지역 만들기, 안심할 수 있는 삶 지키기, 지역 간 연계 촉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작은 거점(다세대 교류, 다기능형 집락생활권) 형성 지원 • 지방도시의 경제·생활권 형성 - 콤팩트화와 네트워크 형성, 연계중추도시권 형성, 정주자립권 형성 촉진 • 대도시권의 안심생활기반 확보

지방소멸위기 대응방안은?

- 인구감소·고령화 시대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시행
 - 현재 제정·시행중인 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법 및 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의 저출산 해결책에 집중되어 지역발전 정책의 대안으로서 실효성 미흡
- 새로운 정책적 대응을 위한 인구감소·고령화 문제지역의 선정 및 지원제도 마련
 - 기존 쇠퇴지역에 대한 대응책인 성장촉진지역 및 도시쇠퇴지역 선정, 개발전략은 중앙정부의 지침 시달 및 공모사업 등의 방식으로 종합개발에 제약 → 인구 및 재정여건 등 지표를 간소화하여 국가적 지방소멸지역 선정, 예산 마련
- 인구감소·고령화 문제를 심각하게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자립 기반을 지원하는 시스템 필요
 - 지방소멸 해당 지역이 스스로 필요한 공간,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포괄보조 방식의 자원 지원
- 지역재활성화정책 마스터플랜(가칭)을 마련하여 창조적 지역재활성화 시책 추진
 - 지방소멸 대응 관련 기본법 제정
 -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수립한 사업계획에 대한 포괄적 재정지원
 - 예산집행 및 성과에 대한 체계적 평가를 통한 사후관리시스템 가동

▶ 내용문의 : 이소영(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, 02-3488-7328, sy2@krila.re.kr)

▶ 본문보기 : ① 이소영·오은주·이희연(2012), 「지역쇠퇴 분석 및 재생 방안」, 한국지방행정연구원 [원문보기](#)

② 한국지방행정연구원/CLAIR 한일공동세미나 「한국과 일본의 지역재생 및 창생」, 자료집(2015) [원문보기](#)

✉ 본 메일의 수신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brief@krila.re.kr로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.